

신경제정책과 고통분담론의 허구

조우현 /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삼 정부는 경제제도약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과표현실화 등 경제정의를 위한 경제제도의 개혁 없이 노동자들의 임금억제정책을 ‘신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삼는 것은 고통분담 아닌 ‘고통전담’의 강요라는 비판이 거세다. 4월 13일, 정부의 고통분담정책의 의의와 문제점을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 ‘고통분담론, 무엇이 문제인가’가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숭실대 조우현 교수가 그 자리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논문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참된 고통분담론」을 실는다. <편집자 주>

목차

1. 머리말
2. 신경제정책의 성격과 허구적 고통분담론
3. 신경제 정책으로서의 임시적 고통분담론
4. 민초의 고통대처 방안과 고통분담론
5. 노동운동의 위상과 과제
6. 1993년 임금노사 임금조정 권고안에 대하여

1. 머리말

어떠한 종류의 사회경제제도를 우리나라에 건설할 것인가가 기로에 선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경제제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 경제운용의 방식, 경제정책의 내용, 그리고 노동운동의 위상과 역할을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결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구상’이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자리잡은 독과점재벌 위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불로소득천국의 회생을 도모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회생의 기치아래 기득권 세력이 집결하여 이 시대의 요청인 사회경제적 제도개혁의 사보타지로서 경제활성화를 추구한다는 우려를 필자는 갖고 있다.

김영삼 정부에 의해 신경제라고 제시되고 있는 자유투쟁과 창의를 넘치는 사회,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 그리고 각 경제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건설이라는 목

김영삼 정부의 경제팀이 취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자율대신 오히려 강화된 형태의 임금규제와 물가동결을 택하고 있으며, 재산소득과 투기소득을 장치인 금융실명제와 세제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기존 사회경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하급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적에 대해 현 경제팀이 취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자율대신 오히려 강화된 형태의 임금규제와 물가동결을 택하고 있다.

또한 재산소득과 투기소득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인 금융실명제와 세제개혁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보다 불로소득천국이라는 기존 사회경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며, 각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하급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의 2절에서 신경제정책의 성격과 허구적 고통분담론을 비판하며 3절과 4절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각 경제주체의 참된 고통분담을 논의할 것이다. 5절과 6절에서는 노동운동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며, 중앙노사협회의에 의한 임금결정을 한 1993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다.

2. 신경제정책의 성격과 허구적 고통분담론

정치권의 '총체적 부패'를 보여주는 장관급, 차관급 및 여당 국회의원의 재산공개에 '3부작 미니시리즈'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청량음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갈증을 일시 해소하였으나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는 고통분담을 통한 경제활성화정책은 신한국 경제질서에 대한 청사진이 결정적으로 결여되고 있고, 신한국 경제운용기조의 철학과 윤리를 찾아볼 수 없어 참된 민의는 회의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지배질서에 있어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부정부패를 낳는 정부의 인허가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정치적 지배질서의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김영삼 정부의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재벌·독과점기업 위주의 기존의 경제질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은 크게 비판되어

야 한다.

기존의 독과점·재벌 위주의 경제구조는 지난 30년간 압축형 경제성장을 이룩한 동력이며 서구에서는 1, 2세기에 걸쳐 일어났던 물질적 진보를 가능하게 한 견인차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테크·부동산 투기 등 단기적 수익극대화를 추구하여 장기적 안목의 기술개발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1986년~89년의 3저호황기에 약 26조에 달했던 경상수지흑자를 생산적 부문의 기반확대로 연결시키는 데 실패하였던 구조였다.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가 고부가가치 제품, 지식집약적 제품의 생산을 위한 투자로 연결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독과점, 재벌기업들은 선단형(또는 문어발식) 기업 경영구조를 탈피한다든지, 부실기업체를 정리하고 각 업체를 전문화시키는 기업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88년 이후 3년간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투기광란의 결과는 우리나라를 '불로소득의 천국'으로 만들지 않았던가? 이정우 교수의 추계에 의하면 1988년 한해의 경우만 해도 토지, 주식 등의 매매로 인하여 실현된 불로소득은 최소 25조원이라고 하였고 89년과 90년에 실현된 불로소득의 크기는 각각 88년보다 더 컸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따라서 88~90년 3년간 불로소득의 크기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소 75조원이나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재벌·독과점 위주의 경제구조와 불로소득의 천국인 경제구조를 그대로 온존시킨 채 92년 GNP 성장률 4.7%가 저성장·경기침체라 하여 우선적으로 경기활성화를 행하고 그 뒤에 제도개혁을 행하겠다고 하는 슬로건은 3공 이후 우리나라에서 추진해온 전통적 고도성장정책과 선성장·후분배의 이데올로기를 그 기저에 깔고 있는 것이다.

92년 경제성장률(4.7%)을 지나치게 낮다고 간주하여 2차에 걸친 이자율 인하로 5조원에 이르는 금융비용을 경감해주는 지원, 5백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억제책을 92년 93년 계속할 경우 주어지는 2조원의 대기업 임

92년 경제성장률(4.7%)을 지나치게 낮다고 간주하여 2차에 걸친 이자율 인하로 5조원의 금융비용 경감, 5백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억제책으로 인한 2조원의 대기임금비용절감분이라는 혜택, 93년 1년간 설비투자자금공급을 9조7천4백억원 규모로 확대, 대폭적인 규제완화, 통화공급의 신축적 운용 등의 지원으로 성장률을 7~8%로 높이고자 하는 현 경제팀의 정책은 과연 합당한가?

금융비용 절감분이라는 혜택, 93년 1년간 설비투자자금공급을 연초 계획보다 5천7백억원 추가된 9조7천4백억원 규모로 확대, 대폭적인 규제완화, 통화공급의 신축적 운용 등 소위 메가톤급 고단위처방에 의한 지원과 혜택을 베풀어 금년의 성장률을 7~8%로 높이고자 하는 현 경제팀의 정책은 과연 합당한가?

뿐만 아니라 7~8%의 고도성장을 위한 공무원 봉급 및 정월 동결, 정부 경상비지출 동결로 정부예산을 1조원 절약하는 정부의 고통분담, 공산품 가격과 서비스료 동결로 인한 기업과 서비스업의 고통분담, 그리고 임금억제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분담 등 각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진정한 고통분담인가?

규제완화로 자율과 참여의 경제를 만든다고 하면서 임금과 가격동결을 시도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극약처방이라고 할 강제적 타율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정부·기업·노동자 각 경제주체의 균형된 고통분담이 아니라 기업에만 엄청난 혜택을 베풀면서 공무원 및 노동자에게는 고통전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현 경제팀의 경기활성화정책은 3공 이후 6공 때까지의 번익빈 부익부, 불로소득의 천국인 경제구조 성장과 분배가 상충되는 경제구조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세계경제에서 유례없는 독과점·재벌경제가 갖고 있는 비효율적 산업구조를 지속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통화공급의 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저하시키며 단순 미숙련 인력의 노동력 공급의 원천이 고갈되어 인력난의 노동시장에서 1년 후 임금상승으로 직결되어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크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 인본주의적이며 반 국민경제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정책을 위하여 김영삼 정부가 경제 각 주체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허구적이다.

3. 신한국 경제질서의 청사진과 참된 고통분담

1962년 이후 1991년까지 6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에서 정부는 평균 8.0%의 높은 성장목표를 세웠으며 한국 경제성장률의 실적치는 이를 상회하는 8.8%였다. 필자는 단언하건대 1992년 현재 1인당 GNP수준이 6천7백달러로 세계 40위이며 국민총생산의 규모는 2천9백억달러로 세계 15위인 위치에서 적정성장률은 5%라고 하겠다. 적정성장률 5%가 앞으로 20년간의 성장목표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의 결과 중진국에 진입한 우리 경제는 선진국과 30년 격차를 두고 따라잡고 있는 국면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1960년대의 선진국의 경제성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년을 전후하여 각각 10년간 즉 1950년~73년간은 선진국 경제역사상 최대의 호황기이자 황금시대였던 바, 이 시기에 OECD국가 중 상대적으로 후진국가를 제외한 선진 17개국 연평균 성장률은 4.9%였다. 이들 국가의 연평균 성장률은 1900년~13년 2.9%, 1913~50년 2.0%, 1973~87년간 2.4%였던 것에 비하면 1950~73년은 20세기 선진자본주의의 최대황금기라고 할 만하다.

필자가 향후 20년간 우리나라 적정성장률을 5.0%라고 한 것은 이에 기초를 둔 것이다. 5.0%라는 적정성장률을 목표로 삼고 실적치가 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고도성장인 셈이다.

따라서 필자는 박재운 경제팀의 7~8%라는 성장률 목표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이는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을 추진해온 정치적 경제적 지배질서의 기득권에 편승하는 인기영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필자는 현정부 경제정책의 철학적 윤리적 기초가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겠다.

왜 경제가 성장지향적이 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현재 임금상승에서 오는 위기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노동생산성의 획기적 증대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당연한 최대의 과제인 노동생산성을 대폭 올리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고부가가치기술의 개발 및 다품종 소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조직과 생산과정의 혁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자, 엔지니어, 다능공 등의 대량창출이 요청된다. 인력개발정책이 절실하다.

사이비 민의의 답은 ‘잘 살기 위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보다 본질적 질문을 하겠다. ‘잘 살기 위하여’ 또는 ‘선진국 경제에 진입하기 위하여’ 성장위주의 정책을 편다면, 무엇 때문에 잘 살아야 하는가? 선진국이 되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와 같은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이 박재운 경제수석팀의 경제정책에는 결여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정책의 철학적 빈곤인 셈이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가 신장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경제건설, 즉 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건설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경제성장이라는 수단을 추구한다는 철학과 윤리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사회경제를 건설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인류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성장을 그 수단으로 추구한다는 철학을 확립하여야 한다.

앞으로 20년간은 고도성장이라는 잣대가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잣대를 가지고 경제정책을 판단하여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철학과 윤리를 우선적으로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가치관과 도덕에서 비롯되는 혼란과 무질서에서 벗어나는 첩경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기 또는 불황기라는 경기변동을 주기적으로 경험하는데 이 경기불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또한 바뀌어져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경제의 성장 또는 침체를 유효수요, 예컨대 소비수요, 투자수요, 정부지출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확대, 저금리정책 등의 유효수요확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케인즈적인 거시경제정책이다.

박재운 경제팀도 통화공급의 확대, 금리인하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징인 기업의 과도한 부채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투자수요를 진작시키며, 1조원의 정부지

출을 줄여 중소기업물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한다든지 또는 시설자금규모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재정지출의 용도변경을 통한 정부재정지원 등 전통적인 케인즈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필자는 경제의 성장 또는 침체를 결정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자동화 투자와 기술혁신 투자인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불황기에 유효수요확대정책을 쓰지 않고 공장자동화 투자 및 기술혁신 투자를 행하는 기업에 집중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스펀터적인 거시경제정책이다.

불황기에 재정수요 확대 및 저금리정책 등을 시행하여 케인즈적 유효수요확대정책을 시행했을 때, 사양산업 또는 한계기업도 단기적으로 회생하여 산업구조조정이 더디어지게 될 것이다. 동시에 케인즈적 유효수요확대정책은 물가상승을 낳고 물가상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의 잠재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국내 제조업의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한 조사결과에 나타나 있다시피, 최근의 경기침체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불러온 ‘만성질환’에 의해 결과된 것이므로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 투자나 기술개발 투자에 집중지원을 하는 스펀터적인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이 자동화 투자와 기술적 혁신에 의해 고급의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끊임없이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이 경쟁적인 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는 독일, 미국, 이태리, 일본의 성공적인 산업연구사태가 보여주는 바이다.

따라서 반독점·반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정책이야말로 우리나라 기업 또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동학적으로 자기혁신을 통하여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이 된다.

왜 경제가 성장지향적이 되어야 하는가? 사이비 민의의 답은 '잘 살기 위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이다. 그래서 성장위주의 정책을 편다면, 무엇 때문에 잘 살아야 하는가? 선진국이 되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와 같은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이 박재운 경제수석팀의 경제정책에는 걸여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정책의 철학적 빈곤인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자극자, 신호자, 그리고 촉진자라는 본질적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의 중소기업을 대량 창출하여 중소기업위주의 경쟁적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하며 비효율적인 독과점기업·재벌기업의 경우 공장분할을 유도하여 이들을 중소기업 창업의 인큐베이터로 만드는 정책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가 향후 20년간 적정성장률을 5%로 유지하며, 슈퍼적 거시경제정책을 행하며, 경쟁적인 산업구조라는 환경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단기에 있어서는 심각한 실업난을 예상할 수 있다. 실업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보험제의 조기실시를 통하여 실업과 빈곤에 대한 정부의 노동시장 지출을 확대하며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금년 또는 내년에 OECD에 참가하려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의 고용보험제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출과 우리나라의 그것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회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만의 사회보장 지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OECD 22개국 평균 13.3%였으나 우리나라는 1.8%에 불과하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60년 OECD 22개국 평균치는 7.0%였다. 우리는 고용보험제를 포함한 사회보장제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최소한 1960년 OECD 평균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술혁신 투자와 자동화 투자를 위한 재정부담, 사회보장제를 위한 재정부담, 그리고 후술하게 될 인력자원 개발을 위한 재정부담은 그동안 시장경제의 생산성에 무임승차해온 재산이 대단히 많은 자, 불로소득자, 고수입의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 등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세계개혁을 통하여 조달하여야 한다. 특히 흥원택 교수는 토지보유(시가대비) 재산세율을 1990년 현재 0.04% (추계치)에서 0.5% 수준으로만 올려도 8조 5천억원의 재원이 조달될 수 있다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보유세율이 형편없이 낮은 0.4%로 미국의 1/36 수준, 영국의 1/3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세계개혁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경제의 생산성에 무임승차해온 기득권 계층에 대한 과세포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간명한 제도개혁을 통하여 이자소득·배당소득·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근로소득 과세와 형평이 맞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조순 전 부총리는 "나라를 세우는 근본은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규제하는 '제도'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하며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및 관념을 청산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현재의 고도성장 위주의 낡은, 성장과 분배가 서로 상충되는 극히도 후진적인 사회제도 및 땅투기 수익률과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한 재산소득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온갖 조세제도를 가지고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는 불가능하다.

신한국경제의 청사진은 성장과 사회적 형평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 있으며, 경제성장은 그러한 사회건설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철학과 윤리를 확립할 것을 우리는 주창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향후 20년간 적정 성장률을 5%로 할 것, 슈퍼적 거시경제정책을 펼 것, 반독점·반재벌의 경쟁적 산업구조를 확립할 것, 그리고 사회보장제를 확충할 것, 시장경제의 생산성에 그동안 무임승차해온 계층의 자산소득과 재산소득에 대한 세계개혁을 할 것 등 6가지 구체적 정책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상의 6가지 구체적 정책에는 정부가 정치적·경제적 지배질서의 이해에 인기영합적으로 부합하는 고도성장 지향적 정책을 자제하는 데 뒤따르는 고통, 독과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국민경제지배를 완화시킴에 따른 양보, 독과점대기업 경영층이 사유재산권의 무제한한

노동조합 무용론이나 노동조합 소멸론은 <그림 1>에서 효율성과 성장만 중요시하는 편향된 견해이며, 사회적 형평성의 결여가 미국경제의 장기적 침체를 가져온 점을 보지 못하는 무책임한 견해다. 또한 박세일의 노사합작론은 <그림 1>의 A와 B를 일체시키는 데 그 논점이 있다면 물역사적 평면적 사고방식에 불과하며, A와 B가 겹치는 부분인 C를 강조한다면 지나치게 협애한 관점에 불과하다.

행사를 제약당하는 희생,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경제에 무임승차해온 불로소득 또는 자산계층의 고통 등을 포함하게 된다.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사회경제건설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부와 경영층이라는 경제주체가 희생과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고통분담이라고 할 것이다.

즉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부분인, 개혁을 위해서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양보해야 합니다. 힘있는 사람은 더 큰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라는 선언은 그야말로 참된 고통분담을 위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참된 고통분담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조화되는 시장경제를 우리나라에 건설할 수 있다.

4.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인력개발정책

필자는 현 경제팀의 인식, 사고방식, 경제철학, 그리고 경제운용의 기조에 있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변신을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신경계획이 입안되고 일부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정책제언을 하도록 하겠다.

현재 임금상승에서 오는 위기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노동생산성의 획기적 증대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인 노동생산성을 대폭 올리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고부가가치기술의 개발 및 다품종 소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조직과 생산과정의 혁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자, 엔지니어, 다능공 등의 대량창출이 요청된다.

사실상 선진국 경제는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의 산업구조와 컴퓨터 지원설계 및 컴퓨터지원 제조공법(CAD/CAM)이 적용되는 생산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이들 생산체계 및 산업구조에 필요한 소프트산업인력, 정보산업인력, 과학기술 엔지니어의 공급에 있어 중대한 애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하여 기존의 노령노동력을 재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

고, 생산물의 저하로 인하여 신규노동력이 될 대졸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시장경쟁의 격화 속에서 한국경제가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은 양질의 노동력, 즉 과학기술공 및 과학기술 엔지니어의 대량창출이라는 요소창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생산요소가 창출되어 있을 때, 이러한 생산요소를 자국 내에서 구하지 못한 선진국의 다품종 소량생산체계 및 CAD/CAM생산체계를 가진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한국경제는 다시 부흥할 전기를 갖게 될 뿐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 및 노하우도 한국 내로 이전될 수 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가 한국에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산업구조 고도화는 과학기술공 및 엔지니어라는 인적자원의 대량창출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이라는 과거의 장점이 소멸하고 아직 새로운 장점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과학기술공 및 엔지니어의 대량창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 선박, 철강 등 조립가공형의 대량생산공정에서도 다능공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시장수요의 변동에 따라 제조공법이 바뀔 때 이에 신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으며, 기계 또는 생산라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상의 원인을 신속히 찾아내고, 회사의 기계를 분해, 청소, 재조립하는 능력을 갖춘 다능공의 역할은 소품종 대량생산체계에서도 중요하지만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에서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다능공의 창출을 위하여 정부는 인문계 고졸자가 생산직으로 회사에 입사한 지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공과대학 졸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지적 능력과 숙련

노동운동이 사회적 형평성을 확충하는 데 성공하자면 비농피용자 대비 조직률이 최소 40% 수준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률을 확대하자면 노동자들이 단결과 연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1990년 현재 비농피용자 대비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17.4%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의 1933년 수준,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의 1920년대 수준에 근접한다.

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기업이 대대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자극하여야 한다.

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과학기술자, 엔지니어를 대량 창출하고, 독과점 대기업, 고임금기업에서는 사내 직업훈련을 통하여 숙련공과 다능공을 두텁게 형성하며, 하청·영세 중소기업과 저임금기업에 필요한 인력은 정부의 직업훈련제도로 그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저부가가치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기업으로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은 그야말로 정부의 직업훈련정책에 달려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한다. 고급 정치인, 관료, 판·검사, 의사, 변호사, 언론인이 최대의 물질적 보상을 받고 부정부패를 통하여 치부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어, 엔지니어, 과학자 그리고 숙련공 및 다능공으로 일하는 생산직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고부가가치 제품과 지식집약적 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며 우리 경제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장기적 지속이 가능하다.

현 제도의 보상체계를 바꾸어 노력근로소득이 보다 우선시되고 중요시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기득권자의 고통이 요구되며, 노동자에게 기능·지식·숙련향상을 위한 사내 현장교육과 직업교육의 확대 및 노동자의 현장 참여를 통한 발언권 강화라는 고통을 감내하여야 한다.

정부는 여타 재정지출을 줄여 인력개발정책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목적을 중요시하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창의력과 헌신을 강조하는 참교육을 행하기 위하여 전교조를 합법화시키는 고통을 감내할 것 또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중장기적 인력개발정책이 수립되고 실천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저부가가치기업, 하청기업 등 경쟁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생산직 부족이라는 인력난에 대해서는 단기적 처방이 필요하다.

생산직부족률은 1985년 2.4%에서 1988년에 이미 2%를 돌파하였고 1991년에는 9.1%, 1992년(3월)에

는 6.8%로 지난 5년간 지속되어온 구조적이며 추세적인 현상이어서 1990년 이후 임금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었다.

되돌아켜 보면 1987~89년 3개년間は 노사분규에 의해 고임금 대기업에 있어서 임금상승이 일어나고 이것이 저임금기업 분야에 전파되었다면, 90년 이후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하청기업 등 저임금기업의 인력난에 의해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노조가 조직된 독과점·고임금 대기업에서 비교임금이라는 형태로 파급되어 고율의 임금상승이 이루어져왔던 것이다.

15만~20만의 생산직 노동자 부족현상이라는 구조적 현상은 기본적으로 미숙련노동력의 원천이 고갈된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노동력의 활용이 단기적으로 유일한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5~39세의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탁아소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 등록된 탁아소의 0~5세 아동 수용인원을 전체 아동수로 나누어 계산되는 탁아소 수용인원율은 스웨덴 47% 수준(1987년), 노르웨이 32% 수준(1989년), 캐나다 8.9%(1987년)이며 일본만 해도 20.6%(1987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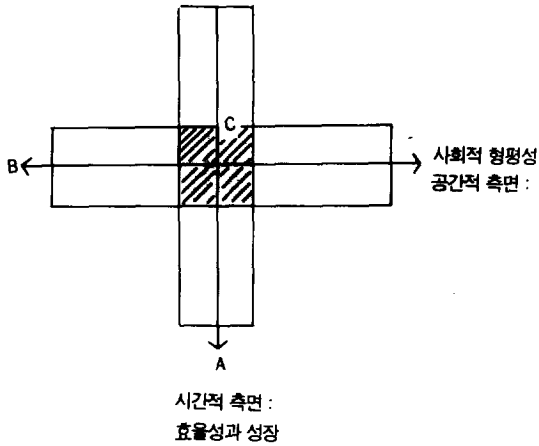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0~5세 아동인구 4백54만명 중 탁아소 수용인원은 13만명에 불과하여 탁아소 수용인원율은 2.9%이다. 공공탁아시설의 대폭적 확대는 그야말로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라는 시각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인력개발이라는 정책은 우리나라 장래의 사활이 걸려있어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를 위해서 각 경제주체가 고통분담을 행할 경우 오늘의 세대의 고통분담은 20년 후의 장래세대에게 성장과 분배가 조화되는 국민경제의 장기적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될 수 있다.

5. 노동운동의 사회적 위상과 과제

자본주의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그림 1〉 자본주의사회의 기본골격



대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노동조합 무용론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일본·미국의 예를 들어 노동조합 소멸론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그림1〉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간명히 밝혀 혼란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인간이 시간과 공간으로 분리될 수 없는 입체 속에서 살아가듯이 국민경제는 자본가에 의해 성장과 효율을 추구하는 사회경제의 시간적 측면(〈그림1〉의 a부분)과 노동운동에 의해 사회적 형평성을 요구하는 사회경제의 공간적 측면(〈그림1〉의 b부분)이라는 분리될 수 없는 입체를 갖고 있다.

자본가는 시장경제에서 이윤을 경쟁적으로 추구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생산물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킨다. 끊임없는 효율성과 성장의 추구를 위해서 자본가는 ①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요구한다 ②기업이 이윤을 내거나 손실을 지속적으로 입어 망하거나 하는 것은 자본가의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달려 있으므로 노동통제에 있어서도 전권행사를 요구한다 ③대량생산의 기계화된 생산방식에서 세분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일을 정확하고 민첩하게 해내는 ‘숨쉬는 기계’로 노동자를 취급한다 ④개인의 능력에 따라 임금, 승진 등을 결정하여 끊임없는 능력주의와 개인주의를 요구한다 ⑤경쟁에 승리한 기업은 경제력 집중에로의 지속적 경향성을 가진다.

이러한 자본가의 요구 중 ①, ②, ③은 노동자가 평생

을 살아가는 공장에서 예속과 종속을 겪과하므로 노동소외문제를 심각히 야기시키며 ④는 수행능력이 없는 자를 실업시키고 도태시킴으로써 능력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에 소득불평 등을 강화시키며, ⑤는 노사간에 공정한 계약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반독점, 반경제력 집중을 추구하고 노사간의 교섭력의 균형을 통한 공정계약을 추구하고, 경영참여와 노동의 인간화를 통하여 노동소외의 극복을 추구하고, 사회보장제를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추구하고 소득불평등의 해소를 추구하고 사회적 기구이다. 즉 자본가는 사회경제의 성장과 효율을 추구하는 주체이며 행위와 사고의 기본원리는 경쟁이며, 노동운동은 사회경제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주체이며 운동의 기본원리는 협동과 단결이다.

〈그림1〉에서 B가 보여주는 사회적 형평성의 확대 없이 A, 즉 자본가 위주의 성장과 효율이 추구된 나라는 미국이 그 고전적인 예에 속하며 그 반대의 예는 실패한 사회주의국가를 들 수 있다. 자본가의 효율성·성장성 추구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형평성 추구가 상호보완을 이루며 조화되는 사회란 시장경제의 생산성을 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는 사회인 것이다.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형성에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노동조합 무용론이나 노동조합 소멸론은 〈그림 1〉에서 A만 중요시하는 편향된 견해이며, 사회적 형평성의 결과가 미국경제의 장기적 침체를 가져온 점을 보지 못

노동운동은 중앙노사 임금조정 권고에 의한 임금인상률을 지역단위, 사업체단위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시에 참된 고통분담을 위한 세계개혁 및 금융실명제 실시 실질임금 보전 및 생산성 임금제를 수용하며 동시에 각 기업에서 경제위원회 설치의 법제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경제를 장기적으로 침체시킬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무책임한 견해인 것이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박세일의 노사합작론은 <그림 1>의 A와 B를 일체시키는 데 그 논점이 있다면 물역사적 평면적 사고방식에 불과하며, A와 B가 겹치는 부분인 C를 강조한다면 지나치게 협소한 관점에 불과하다.

노동운동이 사회적 형평성을 확충하는 데 성공하자면 비농피용자 대비 조직률이 최소 40% 수준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률을 확대하자면 노동자들이 단결과 연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1990년 현재 비농피용자 대비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17.4%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의 1933년 수준,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의 1920년대 수준에 근접한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노동자계급의식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면 199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럽의 1920년대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의식의 형성기라고 볼 수도 있다.

노조조직률은 독일이 1914년에서 1930년까지 12.3%에서 36%로, 스웨덴은 같은 기간중 11.9%에서 24.0%로 증가하였으나 1939년에는 40.6%에 도달하게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01년 6.1%에서 1930년 53.6%로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운동은 앞으로 20년간 조직률을 크게 높이기 위하여 단결과 연대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조직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되는 사회경제제도 건설은 기본적으로 가능치 않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6. 1993년 중앙노사 임금조정 권고안에 대하여

노동조합 조직률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의식이 대단히 약해 '비판적 시민의식'밖에 갖지 못한 상황에서, 노총에 대한 지지도는 노총에서 조사한 결과에서조차도 12.3%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총은 경총과 협상끝에 93년 4월 1

일 올해 임금인상률을 호봉승급제의 통상임금기준 고임금업체 4.7%, 저임금업체 8.9%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사를 대표하는 전국규모의 양 기관이 임금인상안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3년 중앙노사 임금조정 권고안에는 임금인상률 이외에도 정부, 사용자, 근로자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서 1) 물가안정을 약속한 대로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 2) 금융실명제를 조기실시하여야 한다 3) 불로소득 및 음성수입에 대한 과세의 강화, 근로소득세 면세점 인상 및 세율 인하, 성과급 및 실적급에 대한 면세조치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의 합리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4)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나 각종 준조세를 철폐해야 한다 5) 고용보험제를 조기실시하여야 한다는 정책약속을 요구하며, 사용자에 대해서는 1) 기업경영 실적에 대해 노사정보공유 2) 임금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하지 않음 3) 해고를 자제하고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노동자에 대해서는 1)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참여 2)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 등 10개 합의사항을 중앙노사 임금조정 권고안으로 담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임금동결, 경총의 각 사업체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 임금동결, 경제5단체장의 공산품가격 1년동결 등 정부와 경영자들의 바람몰이식 여론공세에 의해 노총은 종전처럼 두자리수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노동계의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교육지책의 일환으로 고임금업체 4.7%, 저임금업체 8.9%라는 한자리수 임금인상에 합의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일부 산별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인 15~18%의 임금인상률(금속노련 15.8%, 자동차노련 17.2%, 섬유노련 기본급 16.4%, 체신·철도 16.5%, 연합노련 환경미화원 18.2%, 타 분과 15~17%)과 크게 달라 내부적 진통과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0개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그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지금은 노조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임금인상률을 높여서 조합원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추구함으로써 노동계가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상호간 반목할 시점이 아니라 구질서의 제도개혁의 요구를 통해 여론의 지지를 확산시키며 제도개혁을 성공시킴으로써 노조조직률을 대폭적으로 높여야 할 그러한 시점이다.

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이 없는 촉구와 권고로만 되어 있어 더욱 그러하다.

노동계 내부의 진통과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노사 임금조정안은 '생산적 노사관계 정립의 이정표'(한국경제신문), '노사가 함께 올린 개가', '노사관계발전' 획기적 전기'(동아일보), '노사관계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조선일보), '노동운동 지도부의 용기 있는 결단'(한국일보) 등 대부분의 언론매체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민여론도 그러리라고 판단된다.

필자는 노총이 이러한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10개 합의사항 중 우선순위로 보아 가장 중요한 다음 3가지 사항을 관철시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보유재산세를 미국의 1/36 수준, 영국의 1/31 수준인 시가기준 0.04%에서 최소한 0.5%까지 올리는 세계개혁을 노동운동의 주요과제로 적극추진하여 약 8조5천억원의 추가적 재정수입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정수입의 증대가 있을 때 근로소득세 면세점 인상 및 세율인하, 고용보험제 조기실시로 인한 실직근로자 생활보장 및 실직근로자 전직훈련 등 노동자에게 실질적 가시적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개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세계개혁으로 인한 재정확보 및 금융실명제 조기실시로 인한 조세형평의 강화를 위해 노동운동은 시민운동단체 및 여타 노동운동단체와 적극 연대하여 그 실현을 위해 전국적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제도개혁을 성취시켜야 한다. 제도개혁을 이루어 노동운동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비농피용자 대비 노조조직률을 현재의 17%에서 크게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정부 예상수준인 4~5% 수준을 상회할 경우, 예상수준 이상의 물가상승에 대한 실질 임금보전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노동운동은 생산성임금제를 수용하여야 한다. 10개의 합의사항 3개항에서 노동자들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노동생산성 향상에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고 성과급에 대

한 면세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며 또한 기업경영실적에 관한 정보의 노사공유를 사용자에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기업경영실적을 공개하여 생산성 향상결과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요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임금제가 노동계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산별교섭으로 나아갈 경우에도 산별교섭에 의한 임금결정은 산업의 다수를 이루는 기업들의 평균생산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의미에서도 생산성임금제를 전제로 하며, 또한 노동소외의 극복을 위한 작업장단위의 노사공동결정제의 실현을 위한 노동운동의 향후 노력도 기업의 경영의 성공과 실패에 공동책임진다는 의미에서도 생산성임금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명실상부하게 생산성임금제를 수용하고 각 기업단위 '경제위원회'를 두어 각 기업에서 생산성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생산성을 계측하며, 향후 투자를 위한 몫과 근로자에 대한 배분몫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노사협의회법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허구적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운동은 중앙노사 임금조정 권고에 의한 임금인상률을 지역단위, 사업체단위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시에 참된 고통분담을 위한 세계개혁 및 금융실명제 실시, 실질임금 보전 및 생산성임금제를 수용하며 동시에 각 기업에서 경제위원회 설치의 법제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은 노조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임금인상률을 높여서 조합원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추구함으로써 노동계가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상호간 반목할 시점이 아니라 구질서의 제도개혁의 요구를 통해 여론의 지지를 확산시키며 제도개혁을 성공시킴으로써 노조조직률을 대폭적으로 높여야 할 그러한 시점이다. 임금인상 자체에 따르는 고통감내와 제도개혁을 시민단체 및 여타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지난한 고통의 감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사회적 형평성이 확충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시점인 것이다. ■